

기윤실 <모두를 위한 정치> 연속포럼 4차

민주주의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2023년 10월 30일(월) 19시~21시 / 기윤실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B1)


발제 |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논찬 | **조성실** 정치평론가, 정치하는엄마들 전 공동대표
이명진 기윤실 간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주의, 선거제도, 권력 구조, 포퓰리즘 등 대한민국 정치 개혁 과제를 살펴보고자 <모두를 위한 정치 연속 포럼>을 엽니다. '모두를 위한 정치, 더 나은 민주주의'에 관심있는 기독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 신청 및
지난 포럼 다시보기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현아 사무국장 02-794-6200
cemk.org cemk@hanmail.net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모두를 위한 정치’ 4차 포럼

사 회 - 이상민 기윤실 좋은사회운동 본부장,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주제발제 -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주의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논 찬 - 조성실 기윤실 정치운동 전문위원, 정치하는엄마들 전 공동대표
- 이명진 기윤실 간사

질의응답 및 토론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주의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하상응 (서강대학교)

1. 들어가며: 포퓰리즘? 양극화?

최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1990년대 초 공산진영이 붕괴하면서 민주주의가 확산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지만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그 때의 예상처럼 민주주의가 널리 퍼지고 공고화 되었다고 볼 사람은 거의 없다. 한때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것처럼 보였던 나라들이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여겨졌던 나라들도 포퓰리즘(populism)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침해되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은 정의하기 매우 어렵다. 학자들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단순하고 명쾌한 개념 정의가 없기는 하지만 다양한 맥락에서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기존 연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대의 민주주의 제도 하의 정치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불만과 분노에 찬 일부 국민들이 (2) 자신들의 입장이 국민 전체의 일반 의지(*general will*)라는 믿음을 갖고 (3) 자신과 다른 사회 집단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4) 타성에 젖은 기성 정치인 대신 카리스마를 갖춘 정치 신예를 내세워 정치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 이념 혹은 정치 운동.”

위의 내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포퓰리즘은 일반 국민 대 기성 정치 엘리트 간의 이분법적 구도에 근거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치 불신과 일맥상통하는 개념(반엘리트주의 *anti-elitism*)이다. 둘째, 포퓰리즘은 일반 국민으로 정의되는 내집단(*in-group*) 대 일반 국민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외집단(*out-group*)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반다원주의 *anti-pluralism*)를 상정하면서, 배척해야 될 대상을 부패한 기성 정치인뿐만 아니라 타 집단으로 규정된 일반인에게서도 찾는다. 셋째,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에 오류가 생길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포퓰리즘이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강한 흡인력을 가진 정치 신인이 필요하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위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이 양극화(*polarization*)다.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우리(*us*)”와 “그들(*them*)”이라는 이분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에서 생겨나고, 동시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선 양극화 현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극화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세대 양극화, 젠더 양극화와 같이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반하여 설명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권에서 진보-보수 혹은 좌-우 간의 갈등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념이 드물지 않게 오용 혹은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는 양극화는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해 빚어진 경제 불평등과 이민의 확산으로 인해 심화된 국가 정체성 위기의 함수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의 입장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과대 대표됨에 따라,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대의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문화 다양성은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을 외집단, 즉 이민자로 돌리는 작업을 수월하게 해 준다. 이러한 상황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맞물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형성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를 활용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의 늪에 빠짐에 따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게 된다.

이처럼 양극화는 정치 갈등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일면 오용 혹은 남용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사회과학 개념으로서 양극화는 그 기원이 분명하다. 원래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국회의원 간의 이념 경향성이 시계열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이것을 이념 양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라고 부른다. 이념 양극화 개념은 추후 유권자 차원의 이념 경향성의 격차를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기도 한다. 한 편 두 진영으로 쪼개진 유권자들이 서로를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양극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을 정서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라고 부른다.

정치 양극화 개념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사용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실제보다 과장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극화의 심각성을 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지표를 활용하여 한국 정치의 양극화 정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자료 분석 이전에 양극화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

2. 양극화: 개념 정의

정치학에서 논의되는 양극화는 이념 양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와 정서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로 나뉜다. 이념 양극화는 보수적인 성향을 띤 집단이 진보적인 성향을 띤 집단으로부터 점점 이념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보수적인 집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보수적이 되고, 진보적인 집단은 더 진보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소가 미국 연방의회이다.

지난 40여년 간 미국 연방의원들의 법안 표결 행태를 보면, 과거와 달리 최근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이 가장 진보적인 공화당 의원보다 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시에 가장 진보적인 공화당 의원이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보다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치인들 차원에서 확인되는 이념 양극화가 유권자 차원에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약 보수적인 유권자 집단이 과거보다 더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유권자 집단이 과거보다 더 진보적이라면 유권자 차원에서도 이념 양극화가 발견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보수적인 유권자 집단이 과거보다 보수 정당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진보적인 유권자 집단이 예전보다 진보 정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이념 양극화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는 보수 혹은 진보 유권자가 각자 자신의 이념 성향에 어울리는 정당을 찾아가는 경향성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정파적 배열(partisan sorting)이라고 부른다.

[표 1] 가상의 시나리오: 유권자 차원의 이념 양극화

	진보정당 지지자	무당파	보수정당 지지자
과거	진보(50) 중도(25) 보수(25)	중도(50)	보수(50) 중도(25) 진보(25)
현재	진보 (125)		보수 (125)

유권자 차원에서 이념 양극화와 정파적 배열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은 유권자 차원의 이념 양극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총 250명의 유권자를 상정하고 있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점(과거와 현재)에서 이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지(무당파)를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과거에는 이념적으로 중도 입장을 가진 50명의 유권자가 무당파에 속했고, 진보정당 지지자 총 100명 중 50명이 이념적으로 진보, 25명이 중도, 25명이 보수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시점을 바꾸어 현재 상황을 보면, 무당파에 속하는 유권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 중도인 유권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념에 따라 지지 정당이 결정되어 125명의 보수 성향 유권자가 보수정당을, 또 다른 125명의 진보 성향 유권자가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있다. 즉, 유권자 차원의 이념 양극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나는 과거에 비해 중도 성향의 유권자 및 무당파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2] 가상의 시나리오: 유권자 차원의 정파적 배열

	진보정당 지지자	무당파	보수정당 지지자
과거	진보(50) 중도(25) 보수(25)	중도(50)	보수(50) 중도(25) 진보(25)
현재	진보(75) 중도(25)	중도(50)	보수(75) 중도(25)

[표 2]에 제시된 정파적 배열의 시나리오에서도 과거의 상황은 [표 1]의 상황과 동일하다. 하지만 정파적 배열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이념적으로 중도인 유권자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차이가 있다. 과거에도 중도 성향의 무당파 50명, 진보정당 지지자 25명, 보수정당 지지자 25명이 있었고, 현재에도 그 수에는 변화가 없다. 유일한 차이는 과거에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25명의 보수 성향 유권자와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25명의 진보 성향 유권자가 현재 시점에서는 각각 자신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다.

유권자 차원에서의 이념 양극화와 정파적 배열의 차이는 과거에 비해 지금 중도 성향의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의 비율이 변했는지 여부에 의해 확인된다. 과거에 비해 지금 중도 성향의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의 비율이 줄면서 유권자의 정당 지지가 자신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면 이념 양극화, 중도 성향의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의 비율이 줄지 않으면서 유권자의 정당 지지가 자신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면 정파적 배열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를 이념 양극화와 정파적 배열로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양극화 해결 전략 구축 작업과 관련이 있다. 만약 유권자가 [표 1]과 같은 이념 양극화 경향을 보인다면 정치인과 정당은 상대방 진영 유권자를 설득하는 전략을 짜야 효과적인 선거 운동 및 정책 입안이 가능하다. 반면 유권자가 [표 2]와 같은 정파적 배열 경향을 띤다면 정치인과 정당은 중도성향의 무당파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정국 운영이 가능하다. 이 두 전략의 차이는 상당하다.

유권자들이 이념적으로 양극화 되었는지 아니면 정파적 배열 경향성이 강해졌는지는 미국에서도 아직 논쟁의 대상이다. 하지만 정치인 차원 말고 유권자 차원에서는 이념 양극화와 구분되는 별도의 개념인 정서 양극화가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정서 양극화란 공화당 지지자가 민주당을,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을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정도가 과거보다 지금 더 큰 현상을 의미한다. 이념 양극화가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서 양극화는 현안에 대한 태도와 상관없이, 상대방 진영에 대한 비호감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 유권자 수준의 정서 양극화는 꾸준히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념 양극화와 정서 양극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양극화라는 개념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야 의미를 갖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이념 양극화를 시계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안 표결 자료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지 않다. 미국처럼 양당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은 점 역시 국회 차원에서의 이념 양극화를 파악하는 작업을 어렵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의 이념 양극화(혹은 정파적 배열)와 정서 양극화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 역시 풍부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1) 매니페스토 프로젝트(Manifesto Project)에서 제공하는 정당 간 이념 거리로 표현된 양극화 현황을 살펴 본 후, (2) 시계열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어치 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를 이용해 유권자 차원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의 장기적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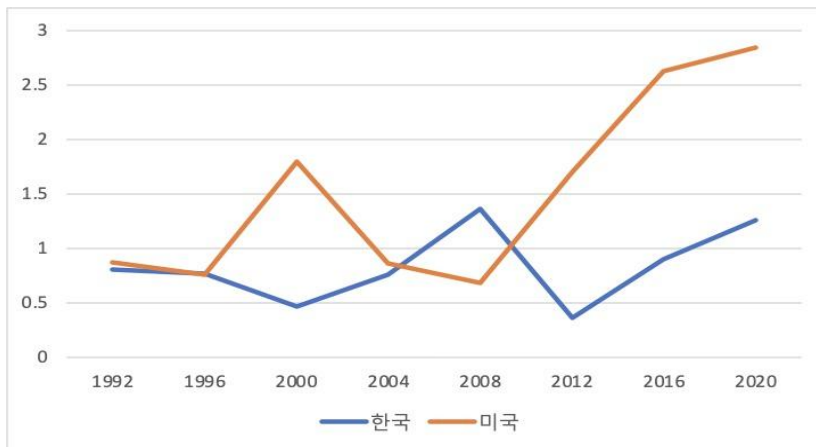
3. 이념 양극화: 실증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축적된 국회의원들의 표결 기록 자료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양질의 자료를 구하기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 기명 투표의 비율이 늘어나긴 하였지만, 아직도 모든 법안에 기명 투표를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이에 정당 간 이념 양극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선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여기서는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에서 제공해 주는 지표를 사용한다.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지표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POL_{jt} = \sqrt{\sum_p V_{pjt} r_{ile_{pjt}}^2 - \left(\sum_p V_{pjt} r_{ile_{pjt}}\right)^2}$$

이 공식은 특정 국가에서 특정 선거가 있는 해의 투표 선호의 양극화 정도를 나타낸다. 정당들의 이념 분포의 표준편차로 측정된다. 구체적으로 $r_{ile_{pjt}}$ 는 국가 j 에 소속된 정당 p 의 t 시점의 단일차원 좌우 이념 점수로 극좌인 -100점에서 극우인 +100점 사의 값으로 나타난다. V_{pjt} 는 국가 j 에 소속된 정당 p 의 t 시점의 투표율을 의미한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정당 간 이념이 양극화됨을 의미한다.

[그림 1] 정당 간 이념 거리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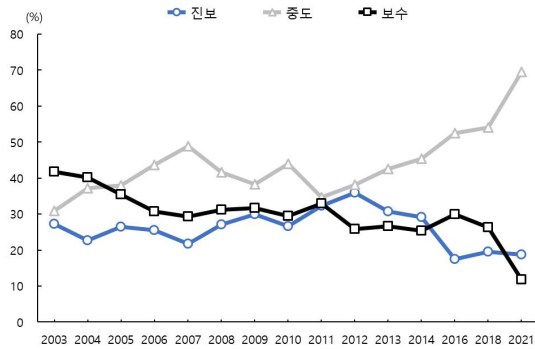
출처: The Manifesto Project(<https://manifestoproject.wzb.eu>)

[그림 1]은 이 지표의 시계열적 추이를 보여준다. 비교를 위해 잘 알려진 정치 양극화 사례인 미국과 나란히 놓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연도 기준으로 자료가 정리된 반면,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연도 기준으로 자료가 정리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물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일부와 하원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자료가 완전히 비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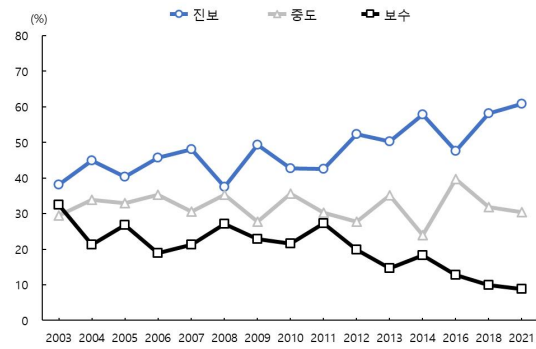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8년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당선 이후 양극화 정도가 급속도로 심화됨을 알 수 있다. 2000년 부시(George W. Bush)와 고어(Al Gore) 간의 박빙의 승부 때 잠시 양극화 정도가 심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정당 간 양극화 정도는 미국만큼 심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간 양극화 정도가 2012년부터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경향성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20년 양극화 정도는 2008년의 양극화 정도와 유사할 뿐, 그 보다 더 심해진 상황은 아니다. 기억해야 하는 점은 이 지표가 주요 정당 간의 이념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 간 거리가 멀어졌어도 유권자들 간의 이념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았다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 차원에서 어떤 양태가 나타나는지를 추가로 검토하여 이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한국 유권자의 이념 양극화, 200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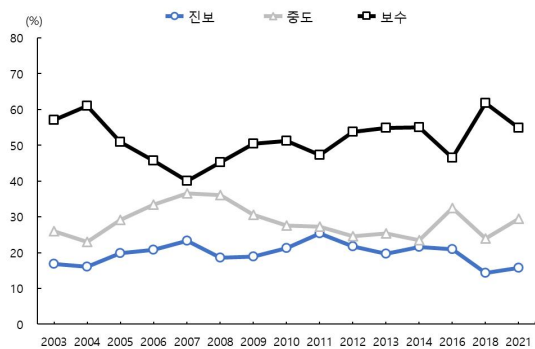
1) 무당파



2) 진보정당 지지자



3) 보수정당 지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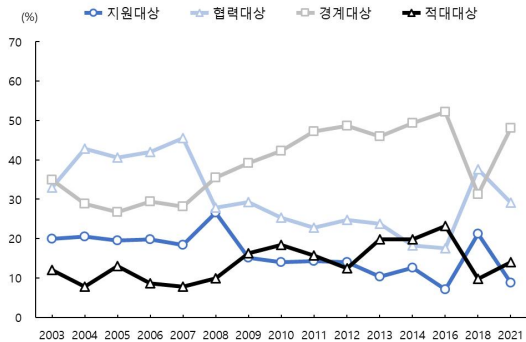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진보적’에서부터 ‘매우 보수적’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진보’는 매우 진보적과 ‘다소 진보적’을 합한 응답률이고, ‘보수’는 ‘매우 보수적’과 ‘다소 보수적’을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누적데이터」, 원자료, 2022. “한국 유권자 차원의 정치적 양극화”, 『한국의 사회동향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를 이용해 유권자 차원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의 장기적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는 한국 유권자의 이념 양극화 추이를 자가 보고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 간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담고 있다. 지지 정당 기준으로 유권자 집단을 셋으로 나누고(무당파, 진보정당 지지자, 보수정당 지지자), 각 집단의 이념 성향을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진보정당은 민주당 계열 정당들, 보수정당은 2022년 현재 국민의힘 계열 정당으로 한정한다. 제 3정당 지지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무당파의 경우 2003년 스스로를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무당파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무당파의 비율 역시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완만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는 줄어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추세는 스스로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무당파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1년부터 그러한 추세가 두드러진다. 2021년 자료에서는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무당파의 비율이 무려 69.5%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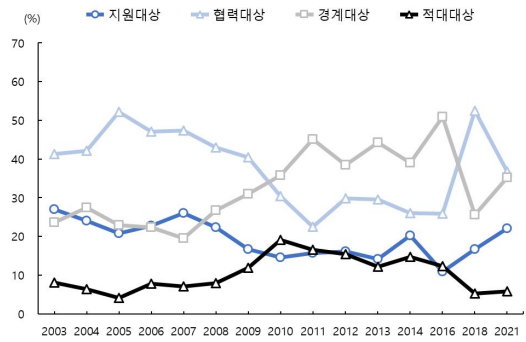
한편 진보정당 지지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스스로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진보정당 지지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진보정당 지지자의 비율은 꾸준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는 보수정당 지지자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스스로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정당 지지자의 비율이 줄긴 했으나 2007년부터 그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2016년 제외). 반면 스스로 중도 혹은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보수 정당 지지자의 비율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3] 한국 유권자의 북한에 대한 태도, 200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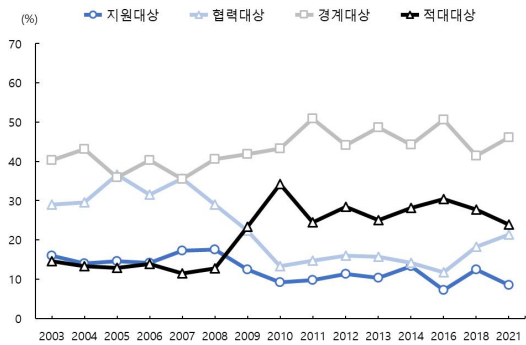
1) 무당파



2) 진보정당 지지자



3) 보수정당 지지자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 문항은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 2021 누적데이터』, 원자료, 2022. 『한국 유권자 차원의 정치적 양극화』, 『한국의 사회동향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재인용.

종합해 보자면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 보이는 양극화 현상은 이념 양극화 보다는 정파적 배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무당파 중에서 이념적으로 중도인 유권자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진보정당 지지자와 보수정당 지지자 중에서 스스로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진보정당 지지자 중에서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인 비율과 보수정당 지지자 중에서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인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현상이 확인되면서 중도 성향 유권자 및 무당파의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가 보이면서 이념 양극화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파적 배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해 보인다.

위에서 확인된 내용을 한국 유권자의 이념 구분에 중요한 정치 현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림 3]은 지지 정당 별 북한에 대한 태도의 시계열적 추이를 보여준다. 무당파의 경우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7년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다가 2018년 잠시 늘어나고 2021년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취했던 대북 유화정책이 2007년 이명박 정부부터 폐기되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잠시 남북관계가 개선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응답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을 경계대상 혹은 적대대상이라고 보는 비율은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추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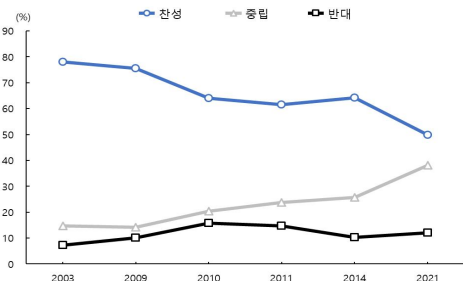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무당파에서 확인되는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진보정당 지지자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진보정당 지지자 중에서도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여기는 비율은 2009년부터 급속히 줄어들다가 2018년 잠시 반등세를 보이고 2021년 다시 낮아진다. 대신 북한을 경제대상이라고 보는 비율의 변화는 이와 상반되는 패턴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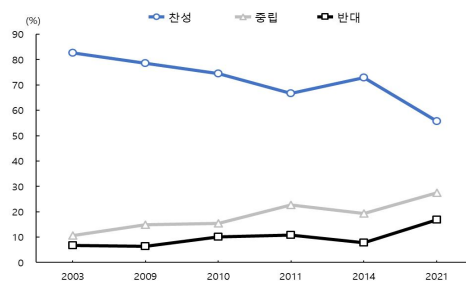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독특하다. 북한을 경제대상이라고 보는 비율은 꾸준히 높고,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비율은 2007년 이후 급속도로 줄어든 이후 좀처럼 반등세를 타지 않는다. 대신 북한을 적대대상이라고 보는 비율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 34.2%까지 높아졌고, 현재까지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에 대한 태도라는 하나의 현안에 기반한 이념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의 이념 양극화는 주장하기 어렵다. 진보정당 지지자의 태도 변화가 무당파의 태도 변화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림 4] 한국 유권자의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 200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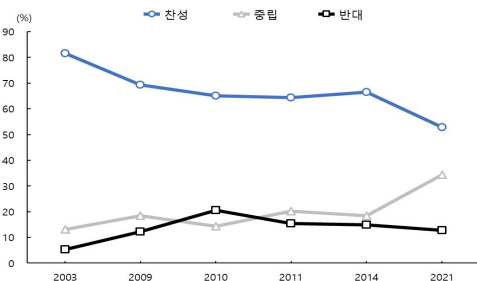
1) 무당파



2) 진보정당 지지자



3) 보수정당 지지자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다음의 주장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1=매우 찬성; 5=매우 반대)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누적데이터』, 원자료, 2022. “한국 유권자 차원의 정치적 양극화”, 『한국의 사회동향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재인용.

[그림 4]는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를 경제 영역에서의 이념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로 삼고 그것이 유권자의 지지 정당에 따라 어떻게 다른 모습이 시계열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보여준다. 무당파의 경우 2003년 이후 정부 주도의 소득 재분배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 역시 늘고 있다. 노골적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비율에는 시계열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사회 통념과 달리 소득 재분배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반대로 소득 재분배 정책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반대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보수정당 지지자의 태도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2021년 현재 소득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정당 지지자의 비율이 55.7%. 보수정당 지지자의 비율이 52.9%로 두 정당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소득 재분배 정책을 반대하는 비율이 보수정당 지지 집단(12.7%)보다 진보정당 지지 집단

(16.8%)에게서 크게 나타나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가 경제 영역에서의 정치 이념을 파악하는 도구임을 고려한다면 과거에 비해 현재, 유권자 차원에서 이념 양극화가 확인된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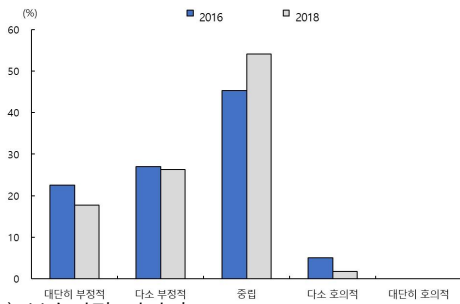
4. 정서 양극화: 실증

다음으로 한국 유권자의 정서 양극화를 살펴본다. 우선 [그림 5]는 보수 정당에 대한 감정이 무당파, 진보정당 지지자, 그리고 보수정당 지지자 사이에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다. 무당파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수 정당에 대한 감정에 큰 변화가 없다. 2016년 대비 2018년에 보수 정당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무당파의 비율은 줄었지만, 동시에 ‘다소 호의적’으로 보는 비율 역시 줄어들었다. 대신 2016년 대비 2018년에 보수 정당에 대한 태도가 미온적(중립)인 비율은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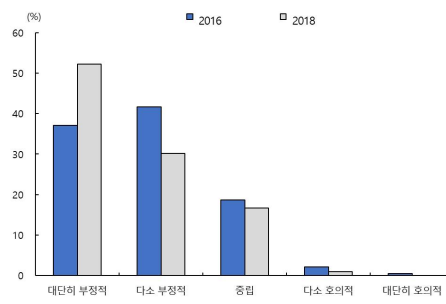
그러나 진보정당 지지자에게서는 보수 정당에 대한 감정 변화가 확인된다. 2016년 대비 2018년에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보수 정당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감정은 크게 늘었다. 2016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2018년은 민주당이 집권당이었던 시절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6년보다 2018년 조사 당시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보수정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진보정당 지지자에게서 2년 사이 정서적 양극화가 나타났음을 시사해 준다.

[그림 5] 한국 유권자의 정서 양극화: 보수 정당에 대한 감정, 2016,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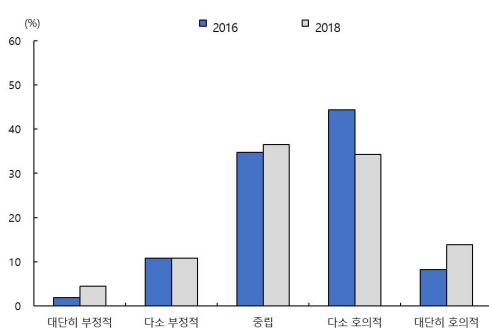
1) 무당파



2) 진보정당 지지자



3) 보수정당 지지자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께서 한국의 주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점수 평가 예를 참조하여 다음 각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느낌을 해당 온도의 온도로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0℃ 대단히 부정적’, ‘30℃ 어느정도 부정적’, ‘50℃ 호의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음’, ‘70℃ 어느정도 호의적’, ‘100℃ 대단히 호의적’, 등 7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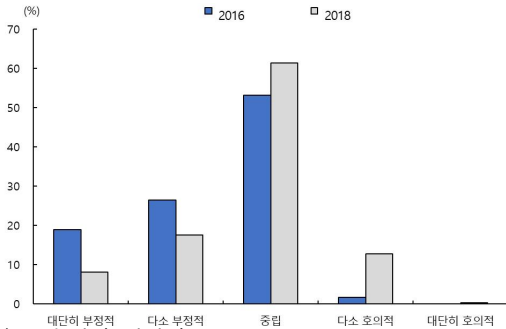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누적데이터』, 원자료, 2022. 『한국 유권자 차원의 정치적 양극화』, 『한국의 사회동향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재인용.

보수정당 지지자의 보수정당에 대한 감정 변화는 진보정당 지지자보다는 무당파에 가깝다.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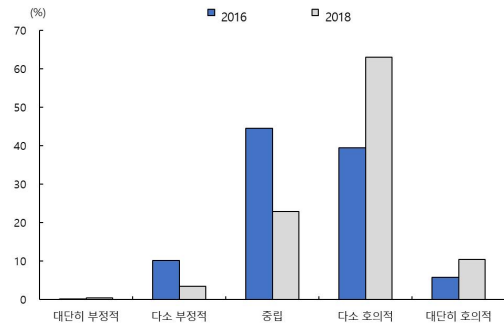
대비 2018년에 보수정당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늘었지만, 동시에 ‘대단히 호의적’으로 보는 비율도 늘었다. 결국 보수정당을 대상으로 놓았을 때 정서적 양극화 현상은 진보정당 지지자에게서 확인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림 6] 한국 유권자의 정서 양극화: 진보 정당에 대한 감정, 2016,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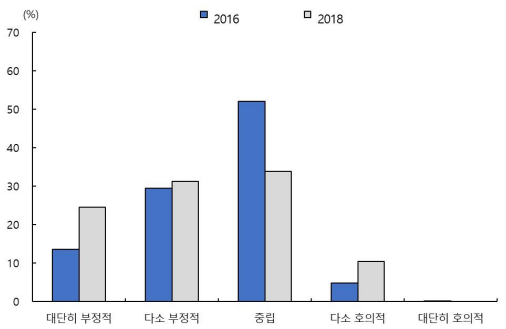
1) 무당파



2) 진보정당 지지자



3) 보수정당 지지자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께서 한국의 주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점수 평가 예를 참조하여 다음 각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느낌을 해당 온도계의 온도로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0℃ 대단히 부정적’, ‘30℃ 어느정도 부정적’, ‘50℃ 호의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음’, ‘70℃ 어느정도 호의적’, ‘100℃ 대단히 호의적’, 등 7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누적데이터』, 원자료, 2022. “한국 유권자 차원의 정치적 양극화”, 『한국의 사회동향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재인용.

[그림 6]은 진보정당에 대한 2016년과 2018년 사이의 감정 변화를 보여준다. 무당파 유권자들은 2016년 대비 2018년에 진보정당에 대한 감정이 눈에 띄게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진보정당을 ‘대단히 부정적’ 혹은 ‘다소 부정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2018년에 줄었고, ‘다소 호의적’ 혹은 ‘대단히 호의적’으로 느끼는 비율은 늘었다. 유사한 패턴이 진보정당 지지자에게서도 확인되는데 ‘중립’적 감정은 크게 줄었고, ‘다소 호의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보수정당 지지자가 진보정당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변화는 조금 다르다. 2016년 대비 2018년에 진보정당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정당 지지자 중 진보정당을 ‘다소 호의적’으로 보는 비율 역시 2016년보다 2018년에 조금 높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보수정당 지지자에게서 정서 양극화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5. 정리 및 제언

최근 학계 뿐 아니라 언론 및 정치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정치인(국회의원) 차원과 유권자 차원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인(의원) 차원에서는 의

회에서의 표결 행태를 통해 진보정당 소속 의원과 보수정당 소속 의원 간 이념 양극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법안 표결이라는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이념 양극화 정도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에 이념적으로 중도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의 비율 변화와 자신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 변화를 통해 이념 양극화와 정파적 배열을 구분한다. 유권자 차원의 이념 양극화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 비율이 줄어드는 동시에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 지지가 높아질 때를 말한다. 반면 정파적 배열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 비율의 변화 없이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 지지가 높아질 때를 말한다. 이와 별도로 유권자 차원의 정치적 양극화는 지지 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느끼는 감정 변화를 의미하는 정서적 양극화로도 파악 가능하다.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양극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 분석 결과,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 보이는 양극화 현상은 이념 양극화 보다는 정파적 배열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무당파 중에서 이념적으로 중도인 유권자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고, 진보정당 지지자와 보수정당 지지자 중에서 스스로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보정당 지지자 중에서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인 비율과 보수정당 지지자 중에서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인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북한에 대한 태도와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가 각각 유권자의 이념 성향을 대표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하였을 때에도 이념 양극화의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 정서 양극화가 진행되는 흔적은 확인할 수 있었다. 보수정당 지지자는 진보정당을, 진보정당 지지자는 보수정당을 점점 더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2023년 현재 한국 정치가 양극화 되었다는 주장은 경험적 근거가 빈약한 인상비평 차원의 이야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예전에도 지금만큼 양극화가 심했는데, 1인 미디어와 정파성을 띤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지금 유독 양극화를 언급하는 정보가 넘치고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치 영역에서의 갈등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과거에 비해 지금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명확히 검증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치명적이다.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들을 공신력 있는 설문 조사에 꾸준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를 이념 양극화와 정파적 배열로 구분하면 양극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다변화할 수 있다. 만약 유권자가 이념 양극화 경향을 보인다면 정치인과 정당은 상대방 진영 유권자를 설득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반면 유권자가 정파적 배열 경향을 띤다면 정치인과 정당은 중도성향의 무당파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정파적 배열의 경우, 이념 양극화 상황과 달리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략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적어도 정치 이념 지형을 진보-보수의 이분법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보자. 우리나라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정치 현안이 100개 있다고 치자. 그 100개의 현안 각각은 찬성-반대 여부에 따라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자. 그리고 진보적 입장에는 0점을, 보수적 입장에는 1점은 준다고 치자. 이 경우, 100개의 현안에 모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 총점이 0점인 유권자

혹은 100개의 현안에 모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총점이 100점인 유권자의 수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100개의 현안 중에서 일부 현안에는 진보적인 입장, 다른 현안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면, 진보-보수의 이분법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스펙트럼에서 진보-보수를 나누려면 50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총점이 50점보다 작으면 진보, 50점보다 크면 보수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때 어떤 유권자의 총점이 49점이고, 또 다른 유권자의 총점이 51점이라면, 이 두 유권자 간의 이념 격차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런데 자의적인 진보-보수의 이분법에 따르면 49점을 갖는 유권자는 진보, 51점을 갖는 유권자는 보수로 구분되고 만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미 진영 혹은 편을 정한 후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는 것이 비극의 출발점이다. 홀로 선 개인의 자격으로 중요한 정치 현안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입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 현안을 읽고 이해한 후 그것을 애써 진보-보수의 이분법에 끼워 맞추고자 하는 것이 비극의 출발점이다. 우리 주위에는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면서도 동성 간 결혼을 지지하고, 동시에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덜 걷기를 바라며 친일파 청산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다.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통합진보당의 해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페미니즘에 동조하지만 이슬람권 국가로부터 난민을 받는 것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 뿐 만인가? 우리 주위에는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준석에 대해 우호적이며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지만 이재명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유승민 혹은 오세훈과 같은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다. 이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 혹은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는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수 혹은 진보 진영의 일원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다. 기윤실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조성실(시사평론가)

1. 들어가며

먼저, ‘민주주의의 걸림돌과 해법’을 주제로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에 논찬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제문을 준비해주신 하상응 교수님과 행사를 위한 제반의 과정을 준비해주신 기윤실 간사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찬은 발제문에 제시된 현황 분석 자료를 전제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도모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추가적 사안들이 무엇인지 첨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 속에 국내의 정치적 양극화를 지적하는 여러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로 인상 비평 차원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젠더 및 세대 간 갈등 자체를 정치적 양극화로 등치시키거나 온오프라인 상에서 사건화 된 몇몇 사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양극화란 단어를 일종의 수사로 덧붙이는 등의 경향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어에 대한 학술적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진행한 발제문의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괄적 개념으로 통용되었던 정치적 양극화를 이념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 두 측면으로 구분하고 국내 유권자의 경우 이념 양극화보다는 정파적 배열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석한 점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서적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치 이념 지형에 대한 스펙트럼적 접근을 제안한 부분에도 동의합니다. 진영 중심의 정치적 사고를 벗어나, 자기 고유의 교차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는 점에도 적극 동의합니다. 공고한 양당 제체 중심의 정당 구조일수록 더욱, 비판적 지지가 전제될 때에야 정당 내 자정 능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념 양극화 경향과 달리 정파적 배열 경향의 경우 중도성향의 무당파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략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발제자의 분석과 무당파에 관한 분석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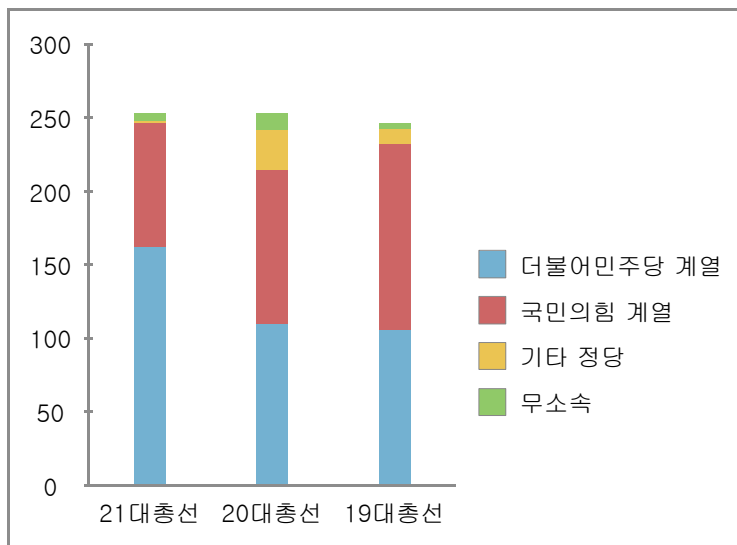
1) 정파적 배열 경향에 관한 양극화 해결 방안에 관하여

정파적 배열 경향 현상의 경우 중도성향의 무당파 유권자를 확보하는 전략을 통해 지지기반의 확장이 가능한 만큼 이른바 스윙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각 당이 표방하는 주요 정책들도 상대적으로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 현실은 이러한 이론적 분석과 다소 상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내부 공천 시스템이란 허들, 둘째, 일명 팬덤 정치로 표현되는 열성 지지자들의 문제, 셋째, 기존 선

거제도의 한계로 인한 현실적 한계가 그 주요 원인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제공된 당선자 통계 자료를 근거로 지난 세 차례의 총선 결과 정당별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했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총 253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한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자는 각 5명(21대 총선), 11명(20대 총선)이었고, 19대 총선의 경우 총 246명의 지역구 당선자 중 무소속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표1]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총선일 기준)



국내 정치 지형에서 정당을 통하지 않고 제도권 내 직업 정치인이 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총선 및 시군구의회 의원 및 지자체장 등 선거를 거쳐 당선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 내 공천 과정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당별 공천 시스템은 선거 정세에 따라 그 기준이 매번 달라져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당연히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기란 더욱 난망합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당내 주류에 편승하지 않고는 선거 출마가 요원한 상황이고 정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열정을 가진 당원들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호 의존적 구조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구 내 지지기반의 요구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선을 통과해야 결선에도 참여할 자격을 얻는 법인데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선 당내 팬덤에 편승해야 하고 당내 팬덤에 편승해 배출된 선수들은 결국 중도적 성향의 무당파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지역구 기반의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사회통합적인) 태도를 보이는 초선 의원들의 출현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정당 내 공천 권력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의 정치 선호가 도드라지는 국내 정치 현실 속에서 외부로부터 인재를 수혈하는 형식의 인재영입 방식이 한동안 주목을 받는 듯 보이기도 했으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 정치적 역량의 부족 문제 등으로 이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제 개혁에 관한 지난한 논의 끝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위성정당 논란, 제3지대를 표방했던 여러 정당들이 보여 준 지난 역사를 거치며 양당정치화는 더욱 공고해진 형국입니다. 결과적으로 정파적 배열에 기여한 정당 구성원들의 직간접적 영향이 정당들의 이념적

양극화 특히 대외적 메시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발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2) 정서적 양극화가 이념 양극화에 미칠 증장기적 영향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이념 양극화 현상이 과대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에 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발제문은 무당층 중 중도 성향의 유권자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념 양극화 자체가 심화되고 있다기보다는 1인 미디어와 정파성을 띤 미디어의 등장으로 양극화를 언급하는 정보가 많아져 이념 양극화 현상이 과장되게 표현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들이 미치는 증장기적 영향입니다. SNS의 등장으로 정서적 양극화를 주도하는 이들의 영향 범위가 넓어졌고 뉴스를 접하는 매체가 변화함에 따라 확증편향 및 가짜뉴스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은 비단 상대에 대한 혐오 발언에 그치지 않고 스윙보터의 탈정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단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증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지켜 볼 때 정서적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피로도가 커지고, 협치가 실종된 제도권 정치 현실이 수년간 지속됨에 따라 스윙보터이자 잠재적 지지자로 존재했던 무당파의 특성도 변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투표장과 공론장에 나갈 의향이 있었던 무당파와 달리 아예 탈정치하는 무당파 비중이 커질수록 사회통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사라질테고 이는 결국 정당 및 정치인들의 증장기적 이념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의 직간접적 자료 분석으로는 무당파 중 중도적 성향인 유권자가 꾸준히 늘고 진보-보수 정당 지지자 중 스스로 이념적 중도라고 생각하는 유권자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더라도 현재 파악되고 있는 정서적 양극화가 결국엔 이념 양극화를 견인하는 도화선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5. 나가며

이런 고민을 하다보면 결국 ‘누가 그리고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의 문제에 다다릅니다. 모두를 위한 정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정당 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진영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사유하는 정치적 시민의식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까의 문제 말입니다. 지난 7년간 시민단체 활동가로,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당 대변인으로, 총선 후보로, 시사평론가로, 두 아이의 엄마로 여러 역할을 오가며 고민해 왔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찾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답이 먼지냐 달같이 먼지냐와 같은 고민, 때때로 피비우스의 띠처럼 느껴지는 구조적 모순 앞에 저 한 사람의 고민이 의미가 있을까 싶어 낙심하는 순간도 없지 않습니다. 하여 줄고에 담아내지 못 한 해결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지는 자유 토론 및 질의 시간을 통해 이어가고 싶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상운 교수님과 이명진 간사님,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주신 참석자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1. 가상준(2022), “투표 참여를 통해 본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징”, 『현대정치연구』, 2022년 겨울호(제15권 제3호), pp.66-97 (32 pages)
2. 강병익(2022), “한국의 반자생주의적 팬덤정치와 정당의 내파와 축소”, 2022 한국정당 학회 하계학술대회, pp.595-603 (9 pages)
3. 박준(2022), “정치양극화 수준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KIPA ISSUE PAPER』, 통권 122호, 한국행정연구원
4. 채진원(2022), “미국 정치적 양극화 논의가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 『인문사회21』, vol.14, no.3, 통권 58호 pp. 907-922 (16 pages)
5. 한정훈(2022), “청년층의 변신? 2017년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적, 정책적 성향과 투표 행태의 비교”, 『EAI 위킹페이퍼』, 동아시아연구원

[논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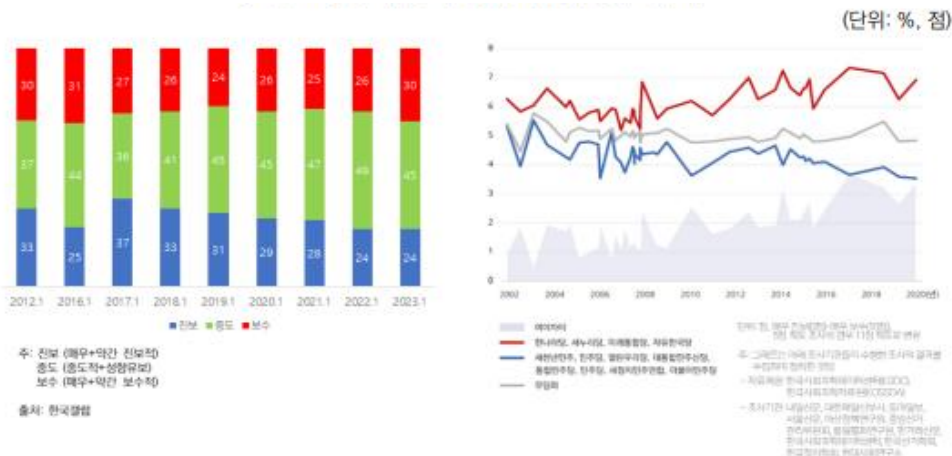
한국형 포퓰리즘과 한국교회를 고민하며

이명진(기윤실 간사)

‘포퓰리즘’과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양극화 현상’을 자세히 분석해주신 하상용 교수님의 상세한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국내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교수님이 제시해주신 분석을 참고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비평’ 차원을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 보이는 양극화 현상이 이념 양극화 보다 정파적 배열에 가깝다는 점, 또 정서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교수님의 분석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미 진영 혹은 편을 정한 후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는 것이 비극의 출발점이라는 현상 분석에도 동의합니다. 교수님의 논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제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한국 유권자가 이처럼 정파적 배열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성향과 무당파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정치인들이 중도층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한국 포퓰리즘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한국형 포퓰리즘이 한국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림 1)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념적 양극화 추이



교수님께서 유권자가 정파적 배열 경향을 띤다면 정치인과 정당은 중도성향의 무당파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념적 양극화 추이¹⁾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중도층은 비교적 최근인 2023년 1월에도 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님이 제시해주신 [그림 2] 한국 유권자의 이념 양극화, 2003-2021²⁾에서 중도층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에서 중도층이 증가한 것은 양당모두 중도를 사로잡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포퓰리즘 현상이 과연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나 설문을 통한 조사 방식이 선거 때 실제적인 투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대양당체제는 중도를 선택할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들이 이분법에 근거한 선택을 정해놓고 정책을 고려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거대양당이 중도층이 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고 있고, 그들을 포섭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아이러니 합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준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³⁾

현재 한국의 정당체제는 양대 정당체제인데, 양당제에서 두 정당의 정책이념은 중도로 수렴한다는 정치학의 고전적 이론과 달리 한국의 양대 정당은 다양한 유권자들, 특히 중도층을 폭넓게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각 정당에서 당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역할은 유명무실한 가운데 팬덤당원들의 수가 폭증하면서,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이 당파적 편향이 강한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또한, 당 지도부의 공천권을 매개로 한 강력한 정당규율은 당내 다양성을 축소시켰고, 당내 의원들은 당론의 기치 아래 양극화된 정치에 동원된다.

위 분석을 통해 거대양당이 형성하는 포퓰리즘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윤핵관, 문빠, 개딸’ 같은 용어가 자주 사용될 만큼 개별 정당 유권자들 뿐 아니라 당내 정치인들 사이에서 팬덤정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박상훈 연구위원은 특정 자신이 혐오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을 다른 사람도 혐오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⁴⁾을 이전 팬심정치와는 다른 팬덤정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혐오와 공격 현상은 비단 상대 진영만을 향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최근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친윤계 인사들의 공격, 이전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공격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교수님이 제시해주신 포퓰리즘의 특징 중 세 번째인 ‘자신과 다른 사회 집단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가 과거에는 서로 다른 정당을 주로 향했다면 이제는 내부를 향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한국형 포퓰리즘은, 중도층의 선택권이 극단적으로 제한된 상황을 배경으로 거대 양당 모두 당내 핵심 정치인 및 강성 당원에게 에너지가 집중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중도층이나 소수자들의 성향을 신경쓰지 않더라도, 결국 그들의 표심은 거대 양당으로 몰려올 것이기에 팬덤들만 신경쓰면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당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을 내부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더 경직되고 극단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에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정당 내 공천시스템 개혁, 선거제 개혁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p.40 박준, 류현숙 외, 2023.

2) 하상용, 「민주주의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p.6, 2023.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p.8

4) 박상훈, 「우리 말고 모두가 적...팬덤정치가 위협한 이유」, 한겨레 21, 2023.

이는 앞서 제시해주신 조성실 대표님의 논찬문에서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논의는 조대표님 논찬문에서 다루는 것으로 같음하고, 저는 논의를 확장하여 최근 대선과 지선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보여준 팬덤 문화에 대한 반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 개신교의 보수화는 선거철마다 보수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차원을 넘어 상대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을 이어가며 근래의 팬덤 정치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화나무에서 발표한 공명선거감시단 활동 결과보고를 보면, 최근 대선에서 전국 220개 교회의 설교 모니터링을 통해 13건의 선거법 위반, 15건의 선관위 신고, 2건의 선거방송심의 신고, 3건의 신문윤리위 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⁵⁾ 기윤실 역시 공명선거운동을 통해 오래전부터 비슷한 문제에 대응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보수 개신교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에큐메니컬 진영의 개신교를 비롯하여 사회참여 신학의 영향을 받은 586세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팬덤 정치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 2022> 페이스북 페이지에 실리거나 공유된 「한국 교회에게 보내는 긴급 메시지」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한 그리스도인의 선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두 문건의 논조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당시 2번 후보였던 윤석열과 그 배우자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한 그리스도인의 선언」은 2022년 3월 8일 기준, 발의자 7인의 699명이 연서명에 동참함으로써 소위 진보 개신교의 향방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편협한 해석의 정교분리를 내세우며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무턱대고 반공주의를 앞세운 과거 개신교의 정치참여 현상에 비해 진일보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특정 세력을 혐오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특정 후보에 편승하지 않는 이들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팬덤 정치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⁶⁾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는 한국형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의 개혁방안과 동시에 한국 교회의 문화 개선도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열린 논의를 위해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이 논찬에서는 자제하고자 합니다. 앞선 노력으로 기윤실은 정파적 배열을 극복하고 정책 선거에 집중하고자, 기독교민단체 및 개인과 연대하여 100대 공약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발제해주신 하상응 교수님과 함께 논찬해주신 조성실 대표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분들과 개신교 문화 개선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향후 기윤실 운동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실**

5) 평화나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활동결과 보고>, 2022. 6. 17.

6) 구교형, <이제는 민주당 복음주의를 떠나보내야 할 때>, 복음과 상황, 2022. 4.